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범예술인 심포지엄

2006. 5. 23 (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국회 이광철 의원실 · 정병국 의원실

기초예술연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연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범예술인 심포지엄



- 일 시 : 2006.5.23(화) 14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 이광철 의원실 · 정병국 의원실
- 기초예술연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연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범예술인 심포지엄

프 로 그 램	
사회 :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3:50 ~ 14:05	등 록
14:05 ~ 14:15	개 회
14:15 ~ 14:30	I. 제1주제
	<p>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과 국가의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p>▷ 발제 : 방현석 (기초예술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p>
14:30 ~ 14:45	II. 제2주제
	<p>기초예술 활성화 지원정책과 예술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위원회의 비전을 중심으로 <p>▷ 발제 : 박신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p>
14:45 ~ 15:00	III. 제3주제
	<p>민간자금화와 예술재원 확보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p>▷ 발제 : 윤용중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p>
15:00 ~ 15:10	휴 식
15:10 ~ 15:40	지정토론
	<p>▷ 토론 : 나호열 (예총 정책연구위원)</p> <p> 염신규 (민예총 정책기획팀장)</p> <p>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p> <p>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p> <p>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p>
15:40 ~ 16:00	종합토론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범예술인 심포지엄

/ 목 차

인사말

국회의원 이광철 (문광위원, 전주완산을)----- 4

국회의원 정병국 (문광위원, 경기가평·양평)----- 6

축 사

국회의원 이미경 (문광위원장, 은평갑)----- 7

제1주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과 국가의 의무

- 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11

방현석 (기초예술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

제2주제

기초예술 활성화 지원정책과 예술재원

- 예술위원회의 비전을 중심으로----- 25

박신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제3주제

민간자금화와 예술재원 확보방안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35

윤용중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인 사 말

역동적인 예술의 변화발전에 부응하는 새로운 예술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작년 9월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한국문화 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 정책의 중심이 '관'에서 '민'으로, 폐쇄된 '탁상'에서 열린 '현장'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장르별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꾸리고 중단기전략계획 "ARKO Vision 2010"을 발표하고,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예술재원의 확보에 있어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예술현장은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예술재원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방식이나 지원의 내용도 역동적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 재정정책은 아직까지 관중심적 사고와 탁상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 정책은 민에서 관으로, 탁상에서 현장으로 옮겨졌으나, 국가 재정정책은 아직도 그 반대의 모양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복권기금 지원에 관한 최근 사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동안 문예진흥기금 편입을 통해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복권기금이 상당했습니다만, 최근 공공문화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에 속한다는 이유로 복권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각종 문화시설 프로그램 지원은 문화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고,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창조하고, 실행하는 것은 예술인의 몫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말 비문화적 논리이고, 관 중심적인 비문화적 논리이며,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여러 예술인들을 모시고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예술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보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예술재원 확보 방안이 많이 나와서 우리 기초예술의 발전에 든든한 디딤돌이 놓이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함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님과 문화예술위원회 김병익 위원장님, 심재찬 사무처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고 애써하신 기초예술연대 및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창작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귀중한 시간을 내서 먼 곳까지 와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예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앞장서서 발로 뭉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광철 (문광위원, 전주완산을)

인 사 말

우리는 지금 문화와 예술의 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경쟁력이 국가 이미지로 연결되고 나아가 국가 산업의 경쟁력,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를 중심으로 매섭게 불고 있는 한류 열풍도 결국 우리의 전통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기초예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초국적 자본과 자유무역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만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되는 기초예술은 고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기초예술의 생존을 위해 예술인들의 애정에만 의지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위원회로 탈바꿈한 이후에도 정부 주도의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 민간으로 이양되었을 뿐, 기초예술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합니다. 단지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줄었을 뿐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기초예술의 활로를 찾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치열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범 예술계 차원의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예술계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위해 각별히 수고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정병국 (문광위원, 경기가평·양평)

축 사

아침·저녁으로 집 뒷동산에서 풍겨오는 아카시아 내음이 이제 싱그러운 봄이 절정에 와있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5월의 봄은 우리 역사에서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는 만큼 예술인들에게도 많은 예술적 동기를 유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예술의 활성화 방안, 특히 예술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기초예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예술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점을 보면 그 근간이 되는 우리의 기초예술의 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초예술 분야도 보편성과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을 동시에 지녀 세계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우리 예술의 수준에 맞게 기초예술의 창작기반을 문화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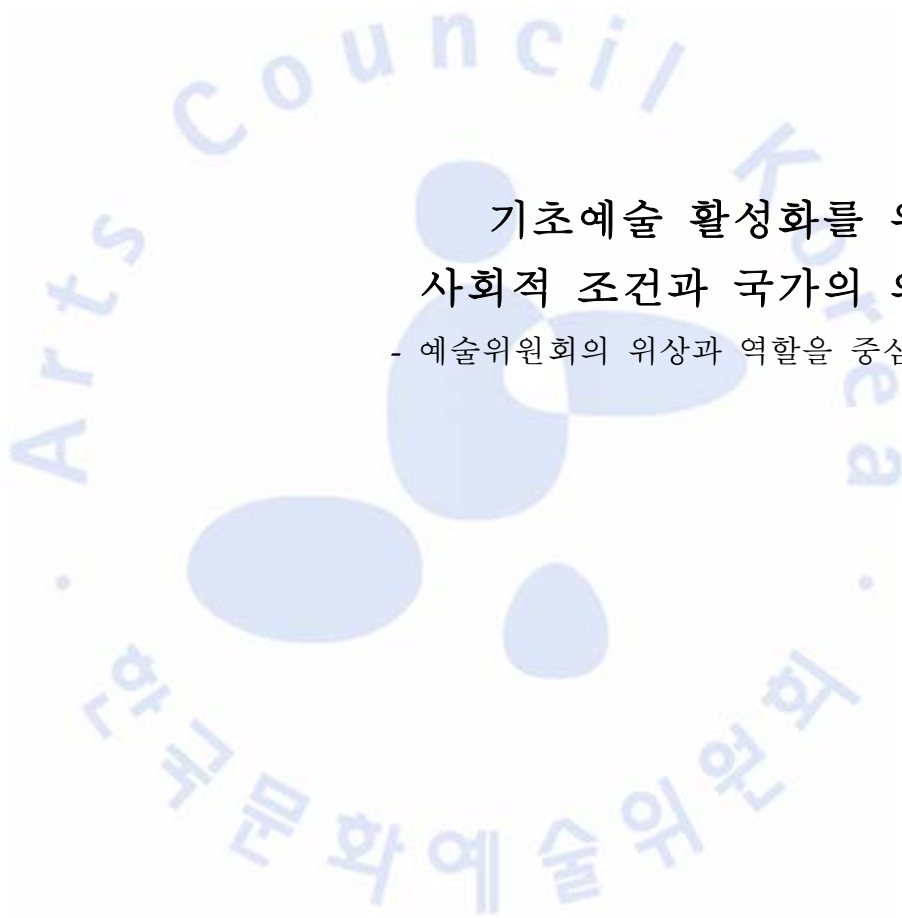
그런 면에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해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기초예술을 활성화 할 다양한 방법을 찾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예술단체와 관객, 정부 그리고 국회와 함께 머리를 모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심포지엄이 그런 토론의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방선거 기간이라는 바쁜 와중에서도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오늘의 심포지엄을 주최해 주신 이광철 의원님, 정병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해주신 두 분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모아주실 기초예술연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모든 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미경 (문광위원장, 은평갑)

제 1 주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과 국가의 의무
- 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과 국가의 의무

- 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

방현석 (기초예술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 중앙대 교수)

1. 예술현장의 실상과 기초예술

① 현장의 붕괴

창작 현장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문학예술과 공연예술, 시각예술을 비롯한 모든 기초예술 장르가 다르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억되지 못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시의 기억력은 문학의 바깥으로 번져나가지 않는다. 연극은 시로부터 모국어의 마술을 선물 받지 못한다. 인문학은 소설로부터 당대에 대한 영감을 얻지 못한다. 문학은 자신의 가치에 합당한 소통의 규모를 지닌 매체를 상실한 채 내부자 거래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문학은 이제 그 근친상간성의 결과로 인하여 더 이상 유전자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창작자들의 개별적인 고투를 통해 드물게 획득된 미학적 성취도 이루어져도 아무런 사회적 공명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가끔 나타나는 베스트셀러는 더 이상 장르의 성취를 갱신하는 미학적 결과물이 아니다. 문학 인프라가 부재한 공간에서 상업적 시장을 지배하는 능력이 문학의 능력을 압도하고, 대체한다.

공연예술도 마찬가지다. 석 달 연습, 하루 리허설, 일주일 공연이 연극현장의 공식처럼 되어가고 있다. 장기공연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대기 중인 다음 사용자에게 무대를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 전통예술과 현대음악 교육의 현장은 대량 실업자를 양산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가끔 대형 공연물이 성공을 거두지만 공연현장의 에너지와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각예술의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시각예술의 역동성을 담보하는 현장인 화랑은 빈사상태에 빠진지 이미 오래다. 지극히 예외적인 몇 사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 결과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예술 매개 현장의 위기는 우리 예술이 직면한 위기의 전체적인 면모를 상징한다. 예술 매개 현장은 창조와 향유를 연결하는 고리인 동시에, 창조적인 예술 향유행위를 선도하는 견인차이기 때문이다. 매개 현장(매체)이 붕괴하면 창작자와 창작현장이 무력화된다. 현장기반이 무력화되면 좋은 작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점점 약화되고, 창조적 향유자는 예술적 전범과 조우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매개현장은 창조와 향수, 스스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동시대인들을 향해 열려 있는 공명판이다. 매개 현장의 붕괴는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전범을 갱신해나가는 공명판의 실종을 의미한다. 좋은 작품이 출현해도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것이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 우리 예술 현장의 실상이다. 한국사회가 도달한 경제의 규모와 수준에 비추어보면 예술현장의 처지는 말하기 민망스러운 지경이다. 정말 놀라운 것은 기초예술 전체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보여준 참으로 놀라운 무신경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예술 현장의 재난을 사회적 재난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술이 생산되고 소통과정을 거쳐 창조적 전범으로 기능하면서 창조적 향유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에 대한 관리가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을 개인의 호사취미로 이해하고 문화산업의 변방으로 여기는 견해가 아직도 폭넓게 존재한다.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예술을 시장기능에만 종속시켜 사고하도록 만들어 왔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예술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었다. 예술현장의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문화예술진흥원을 예술위원회로 개편한 것도 이러한 관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의 예술가들이 예술위원회의 출범과정에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도 국가예술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예술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에 가까워오지만 현장예술가들은 예술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걸었던 기대도 점차 가라앉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예술위원회에 걸었던 기대와 달리, 과거의 문예진흥원과 별반 달라진 것을 실감할 수 없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② 왜 기초예술인가

예술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왔다. 현대예술과 고전예술로 분류하는 기준은 시간이다. 문학예술과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형상의 도구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온 순수예술이란 용어는 예술행위의 동기와 최종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한 분류법 속에서 출현했다. 창작행위의 동기와 최종적 목표가 이윤의 창출이 아닌 예술적 가치의 실현에 있는 예술을 순수예술이라고 규정해온 것이다. 순수예술에 대응하는 개념인 상업예술은 그 창작활동의 동기와 최종적 목표가 이윤의 창출에 있다. 그러나 미학적 완성도와 예술적 성취를 최종적 목표로 한다고 해서 순수예술이 비상업적인 예술인 것은 아니다. 창작행위의 동기와 최종적 목표를 이윤의 창출에 두지 않았다고 해서 상업적 가치가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순수예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다. 순수예술이 이윤의 창출을 최종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과 경제적 부가가치의 존재 유무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순수예술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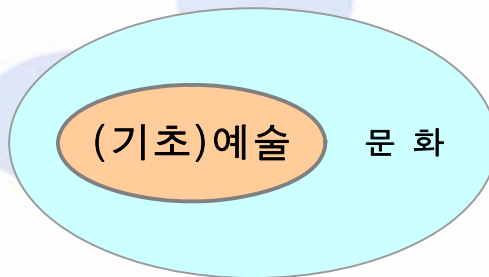
기준에 사용되어온 순수예술이란 용어 대신 기초예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상업예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순수예술이 스스로의 경제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순수예술을 상업예술과 적대적으로 대립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순수예술은 우리 사회에서 참여예술이라는 개념에 대응하는 정치적인 용어로 오용되어왔다. 모든 위대한 예술은 인간에게 깊은 감흥과 뜨거운 열정,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준다. 이것은 예술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순수예술이란 용어는 상당히 빈번하게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곤 했다. 예술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가치지향성을 배제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전파하는 데 '순수예술'이란 용어가 이용되었다. 예술가들이 예술이 지닌 사회정치적인 가치를 망각하면 할수록 예술이 정치권력의 장식물로 전락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수예술이란 용어로는 그것이 범주로 삼고 있는 대상이 예술계의 '생태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순수예술이란 용어로는 예술생태계의 지형도를 '가치의 위계'에 따라 그려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술에서 권력의 서열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가치의 위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술행위의

동기와 최종적 목표가 상업적 이윤의 실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예술행위의 목표가 순수한 미적 가치의 구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가치의 위계는 그것이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얼마나 필수적으로 근원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기초예술은 한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를 해석하고 형상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전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기초예술은 하나의 공동체가 지닌 총체적인 삶의 형식과 가치를 형상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것을 다시 갱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엄격히 말해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예술은 '예술' 그 자체다. 시대의 곤혹과 대결하며 세계를 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섬광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예술'이다. 기초예술이란 용어는 굳이 찾는다면 '응용예술'이나 '파생예술', 또는 '상업예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정확치 않다. 기초예술에 대응하는 범주는 '모든 사회와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정확한 것은 될 수 없다. '모든 사회와 문화' 속에 기초예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더 명료해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과 지향하는 가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형상화를 통해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모든 활동까지를 통칭한다. 문화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서 세계를 해석하고 형상화하는 영역을 주요하게 담당하는 것이 예술이다. 예술은 문화와 같은 층위에서 병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화가 한 사회의 가치 지향성을 사회적으로 풍속화하고 개인적으로 내면화한 결과물이라면 예술은 부단한 창조 작업을 통해 그러한 문화일반에 대해 기초적인 자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초예술'은 '예술'이라는 용어가 지닌 본래적인 의미를 현실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기초'라는 단어를 동원하였을 뿐 사실은 아무런 전치사도 없는 상태의 '예술' 바로 그 자체인 것이다.

2. 예술위원회의 위상과 과제

① 예술위원회의 방향과 위상

2005년 9월 출범한 예술위원회는 지난 4월 중, 단기 전략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은 첫 문장에서 정책의 중심을 '예술'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비전에서 예술위원회가 '당대문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예술이 보다 건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문화예술 생태환경을 개선해갈 것'임을 천명한 대목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문화'와 '예술'이 어떻게 관계하며 그것에 접근하는 원칙이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위원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 문예진흥원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회의 출범과정에서도 되풀이 되었던 정책의 방향과 대상을 둘러싼 논란에 중지부를 찍은 의미를 지닌다. 위원회가 문화 생태계의 발원지인 (기초)예술의 생태계 관리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위원회의 사업 방향과 대상에 대한 올바른 선택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이것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모든 사회에는 차원을 달리 하는 여러 층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층위를 담보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정치적 차원, 경제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차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의 문화차원을 담보하고 예술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30년 동안 예술활동을 지원해온 문예진흥원이 있었지만 국가예술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구는 아니었다. 국가 예술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달리 없다보니 단지 예술 지원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일 뿐인 문예진흥원에 과도한 기대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진흥원의 상급 기관인 문화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예술위원회는 '국가의 예술을 관리하는 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은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구호와 정책의 난발에 의해 성취되기보다는 정부의 타부처 혹은 기관과의 협력과 정책교류를 통해 진전되고 증폭된다. 특히, 관민의 유사기관 혹은 지역 기구간에 예술지원 정

책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예술을 관리하는 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강화될 횡적 종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 지역예술위원회, 공공문화예술기관, 민간재단, 기업체등과의 유기적 정책교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나아가 예술의 흐름이 넘나드는 국제적 예술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연계해나갈 것이다.(비전 27p)

이러한 의지는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예술위원회의 위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냉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술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지만 그 민간독립기구가 자리 잡고 있는 지점은 문화관광부 산하이며 예술위원회를 뒷받침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다. 여전히 국가의 예술정책 방향과 관련한 업무의 중심은 문화부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위상에서 예술위원회가 국가의 예술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관철해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예술위원회가 문화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와 같은 위상을 확보할 때만이 국가예술정책을 총체적으로 입안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상의 예술위원회는 국가예술정책을 총괄하는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의 예술위원회는 문화부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여러 위원회 중에 하나일 따름이다. 영화진흥위원회나 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기구들과 병렬적 지위에 놓여있을 뿐인 예술위원회가 어떻게 국가의 총체적인 예술정책을 입안하고 관철해나갈 수 있겠는가. 예술위원회의 출범은 분명한 진전이다. 그렇지만 국가의 예술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위상과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예술위원회의 위상이 얼마나 애매하고 위태로운 것인가는 예술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기초예술연대가 개최한 연속토론회(제 5차- 음악, 전통 부문)에서 현경채가 지적한 바 있다.

전통예술분야는 문화관광부, 문예진흥기금사업, (재)서울문화재단 등 크게 3개 부처에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 문예진흥기금사업과 (재)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지원사업의 성격과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경중과 우열을 가르는 것은 맞지 않으나, 사업신청과 심의가 진행되는 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관례이다. 먼저 문예진흥기금 선정사업이 가정 먼저 행해지고 지원될 사업이 결정된다.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의에 접수하였으나 기금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문예진흥기금사업과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은 특별히 차별성을 찾기 어려우나, 단지 전자가 소액다건 중심의 지원이고 서울 문화재단이 다액소건 집중지원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심의에서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의 심사에서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 단체는 적은 금액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현실에서 먼저, 문예진흥기금 지원에 심의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문예진흥기금 심의에서 떨어진 사업이 서울문화재단에서 다액소건 형태의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음악 전통 분야 토론회 자료집> 15쪽)

여기에 더해 지역문화예술기관과의 관계 정립도 위원회의 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화부의 결단에 따라 일반 지원사업은 대부분 위원회로 이관되고 있어, 문화부와 위원회의 지원업무 중복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중복이 나타나는 지원사업 영역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담당 주체가 분명치 않은 예술정책의 영역이다. 위원회는 물론이고 문화부도 예술정책을 총괄해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정부기구 안에서 문화부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이 그것을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부 내부의 미흡한 체계와 역량배치는 그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체육에서 종교, 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부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예술생태계를 유지 관리하는 일은 그 중요성에 비교해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문화적 관점을 확립하고 예술정책을 관장해야 할 문화부가 새로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조직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만 더욱 애매하게 만드는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국가의 기초예술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의 부재는 예술위원회의 출범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② 예술위원회의 비전과 과제

예술위원회는 자신의 조직적 전망을 '세계적인 문화예술지원기구'로 설정하고 전략목표와 핵심과제로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혁신', '문화예술 시설 운영혁신', '문화예술 지원서비스 경영체제 구축', '문화예술 자원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적 전망은 예술위원회가 자임하고 있는 조직의 위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간과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예술인 중심의 민간기구로서 국가의 예술을 관리하고 개척하는 국가 최고의 예술기관이다.(비전 44p)

이러한 위상은 예술위원회가 확보해야 할 바람직한 위상일 수 있으나 결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람직한 위상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비전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의 예술행정기구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신뢰는 기관의 위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관의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는 토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상이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위상의 역할을 예술위원회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에 해당하는 '지원체계와 운영의 혁신을 넘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확립되어야 한다.'

질식 상태에 놓인 현장을 실질적으로 회생시켜내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이 예술위원회가 당면한 첫 번째 과제에 해당한다.

어떻게 하면 예술위원회가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예술위원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예술현장이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위원회를 예술 현장 출신들로 교체하고 과거에 진흥원이 해오던 지원사업의 절차와 규모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 목표에 따라 과제와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새로운 리더십은 결코 생겨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위원회의 근원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예술을 관리하고 개척하는 국가 최고의 예술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예술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위상과 지위를 확보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은 셈이다. 예술위원회의 현재 위상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과제에 대한 안팎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예술위원회를 만능으로 생

각하고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될 경우, 예술위원회는 그 자신이 불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술 정책과 행정에 대한 더 큰 불신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③ 정책의 근거와 예술생태계에 대한 조사작업

과거의 문예진흥원이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했던 핵심적 이유는 독임제 원장체제나 지원의 공정성 결여에 있지 않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예진흥원에서 정책연구를 담당했던 박두현의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문예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연간 34개 분야, 세부분야로 하면 64개 분야에 500여명의 예술인들이 각종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참여도를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예술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의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문예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제도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결과와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늘 있어왔지만 이 심의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예진흥사업 수행과정의 예술인의 참여도와 그 운영방식의 하나인 심의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심의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해서 예술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1차 토론회 자료집> 31쪽)

핵심은 언제나 사업의 방향과 목표다. 운영과 집행은 그 방향에 따라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방향과 목표가 없거나, 잘못된 사업은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도 실효가 없다.

올바른 사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예술생태계에 대한 조사와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매 토론회마다 제기되었다.

전체 예술의 생태계가 파악되어야 한다. 한국의 예술상황은 현재 '문제적 장르'가 위축되고 '지배적 장르'는 풍요를 구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기반 장르의 위축이 머지않아 지배적 장르의 추락을 가져올 것은 뻔하다.

예를 들어서 서사문학의 붕괴는 시나리오의 고갈로, 시나리오의 고갈은 영화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기초예술의 위상이 밝혀져야 한다. (<문학분야 토론회 자료집> 7쪽)

조사작업은 예술 생태계 전반만이 아닌 장르별로도 필요하다.

현재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문화예술관련 D/B구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장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적재적소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병행하면서 보다 정확한 전 분야의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정책이 설정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미국의 NEA처럼 기획, 연구, 지원 등의 종합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인다 (<시각부문 토론회 자료집> 17쪽)

판단의 근거가 확립되지 않고 서는 기초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도 확인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예술정책도 마련될 수 없다. 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재원에 대한 논의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도 예술생태계에 대한 조사 작업은 필수적이다.

3. 기초예술과 정부의 역할

예술은 하나의 사회를 존속시키는 문화적 토대다. 사회구성원들은 모두 그가 의식하든 않든 간에 그 사회가 축적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영위해나간다.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의 질을 규정하는 것은 예술이다.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경제적인 지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사회의 발전이 경제적 성장만을 뜻하던 시대는 이미 지난 세기와 함께 지나갔다. 이제 세계는 '성장'보다 '성숙'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세기 말부터 세계는 앞 다투어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목청을 돋우었다. 우리 정부도 문화강국을 표방했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주목과 강조가 문화에 대한 존중심이 갑자기 높아져서는 물론 아니었다.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도 문화적 능력의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지적 생산능력과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문화산업

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바야흐로 문화산업이 국가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었고 처음으로 국가예산의 1%가 문화예산을 책정되었다. 이미 개인의 생활마저 국제화된 '무한경쟁' 시대에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지식과 문화역량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의 시대로 불리는 21세기에 접어드는 것과 동시에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사회에서 기초예술의 위기감이 절정에 달했다.

예술이 붕괴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동안 국가가 주목하고 투자한 곳은 '예술'이 아니라 '문화산업'이었다.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곧 문화강국을 이루는 길이라는 정책 담당자들의 믿음은 확고해보였다. 문화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문화산업 역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책 담당자들은 문화생태계 전체를 바라보지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 문화생태계 속에서 해석과 형상의 영역을 담보하는 예술은 문화적 생산 활동의 자궁에 해당한다. 창조활동의 발원지인 예술의 영역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문화의 댐이 풍요로워질 수는 없다. 문화산업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예술의 현장에서 창의성이 사라진 다음에는 문화산업의 번성도 지속될 수는 없다.

정부의 관심과 투자의 초점이 예술이 아니라 문화산업에만 맞추어졌던 것은 우리 시대에 문화가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문화의 중요성은 단순히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21세기의 변화한 세계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적 관점과 미학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는 물질적 자원보다 지식기반이 중요하고 학문적 이론보다 감성적 창의성이 더욱 중요한 시대다.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적 방안을 찾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관점 자체를 문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과거와 같은 고정된 시선을 버리지 않고서는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문화적 정책이 출현할 수 없다. 문화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 국가는 문화의 발원지인 예술의 생태계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예술은 물질로 측량할 수 없고 그 어떤 제도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담보하는 문화 인프라의 핵심에 해당한다. 예술은 하나로 규격화되지 않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화의 근간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프라는 산업적 영

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도 존재한다.

문화를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과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국가의 관점과 정책은 제도와 예산을 통해 입증된다. 현장예술가들이 우리 정부의 예술정책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와 예산을 통해 정부의 관점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원회정부라고 불릴 만큼 많은 대통령산하 위원회가 있음에도 예술위원회의 위상은 정부 한 부처 산하 기관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문화부에 국가 예술정책 전체를 입안 조율하고 관장해나갈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술위원회의 주요 예산은 여전히 세수로 확보된 국가 기본 재정이 아닌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확보된 기금이 문화예술 영역에 투여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조금도 없지만 그에 앞서 기본 예산이 국가 재정에서 안정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정부예산에서 예술생태계 유지비용 지출을 회피하는 것은 여전히 예술을 사회의 필수적 가치를 생산하는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예술은 경제적 발전의 관건인 동시에, 경제적 발전을 사회 정치를 포함한 문화일반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동력기관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예술의 환경이 아닌 예술 자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미적 천박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예술적 상상력과 단절된 인문학의 운명 또한 다르지 않다. 창의성은 예술의 본성이며, 고도의 창의력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시스템이 민주주의다. 예술이 다른 사회영역의 장식물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영역 전체를 역동적으로 변화·성숙시키는 핵심적 요인이 되는 세기, 그것이 바로 문화의 세기다. 문화의 세기를 이끌어가는 정부는 예술생태계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통해 풍요롭고도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 2 주제

기초예술 활성화 지원정책과 예술재원
- 예술위원회의 비전을 중심으로



기초예술 활성화 지원정책과 예술재원

- 예술위원회의 비전을 중심으로 -

박신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경희대 교수)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예술기금 설치의 당위성

지난 4월 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ARKO 비전 2010'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이 날 선포된 비전은 위원회로 전환한 이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예술진흥의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예술진흥의 방향을 설정한 첫 작업인 셈이다. 지난 2005년 8월에 발족하면서 당장 2006년 사업을 놓고 위원들이 새로운 구도를 짤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2006년 예산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회는 2007년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지원정책의 방향과 틀을 새롭게 짜는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비전작업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전작업은 앞으로 위원회 체제에서 구상하고 실행하게 될 지원정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장르 및 기능별 소위원회에서는 2007년의 사업계획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는 2월 초에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어 문화관광부를 통해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말, 기획예산처는 07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예산에 대한 지출한도를 통보해 온 바, 사업비 총액은 2006년 대비 7.6%가 삭감되면서 이는 지역문화활성화지원에서의 10% 삭감과, 대학로복합공연장 운영관련 12억 전액의 삭감, 그리고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총지출비 요구액 1,746억원(경상사업비 1,621억원 + 기금운영비 125억원)에서 기획예산처에 의한 지출한도 예산은 1,145억원(경상사업비 1,028억원 + 기금운영비 117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곧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금사업을 새롭게 하기 위한 예산계획의 좌절인 셈인데, 실제로 지원목표를 재설정하면서 기존 사업을 재편성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중장기 사업계획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발제를 통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떠한 비전을 토대로 정책목표를 달리 설정하면서 중기사업계획이 마련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처한 상황을 짚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비전에 따른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기금 배분의 기준과 재원조성 방안을 놓고 논의를 열어가고자 한다.

비전과 정책목표에 따른 사업내역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제안된 비전 작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었던 것은 ‘예술’과 ‘예술가’를 전면에 내세우는 일이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단순히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활동이 아니며, 제도적으로 고착된 장르 중심의 예술 활동을 우위로만 고집하거나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창의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예술의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에서 작동되는 ‘문화적 힘’의 우월성을 보다 당당하게 내세우려는 것이다. 또한 창작활동의 주체로서 ‘예술가’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도, 단순히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들만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주의력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고 인식하며,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작활동의 성과물이 세상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자는 의미이다. 그들의 역할을 사회적 맥락에 놓고, 창작활동 역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가치 지향적 활동임을 전제로 하는 한에서 예술가를 전면에 놓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결과로서만 바라보던 지원 개념을 벗어나, 창작활동 전 과정(예술의 창작과 생산, 향유, 나아가 미래의 자산으로 활용되는 제반 영역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작-매개-향수 및 교류·보존의 선순환적 지원이라는 것의 논리도 실제로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제까지 예술진흥정책이 기금 배분에 축소되어 있었던 만큼 그래서 지원에 의한 예술의 자기 갱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하기보다는 기금 배분의 공정성이나 이해관계로 시비가 반복되었던 만큼, 진정 지원이 예술의 진흥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예술’ 자체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주어지지 못한 현실을 깨우치기 위함이기도 하다. 예술이 갖는 문화적 힘을 드러낼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 그 목표가 예술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다. 위원회의 선언적 표현인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는, 그런 점에서 예술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보자는 실천적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미션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있는 삶을 누리게 함’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곧 지원 자체가 궁극적으로

창조활동을 고양시키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과 삶을 이어내는 총체적인 관계와 가치 획득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전으로 제안된 '예술을 통한 창의적인 사회, 성숙한 사회, 열린사회 구현'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전제로 일종의 사회 발전과 예술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예술로부터 발원하는 문화적 가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창조적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회 형성, 즉 문화사회, 문화국가 형성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현될 핵심가치는, '예술 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회 (Creativity) - 예술 작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숙한 사회 (Enrichment) - 예술적 가치가 다양하게 피어나는 열린 사회 (Diversity)'로 모아져,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창의성 확대'와 '성숙성 증진', '다양성 확보' 등으로 잡았다. 이는 다시 예술 현장의 차원(활기찬 예술현장)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유의 차원(삶을 채우는 예술) - 미래지향의 예술의 가치구현의 차원(미래를 여는 예술)으로 일치되고, 결국 이같은 구도 속에서 비전을 수립할 사업들이 목표단위별로 배치되었다.

활기찬 예술현장은 예술, 예술가,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예술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예술현장의 문제를 말한다. 여기서 다시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예술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으로 나뉘어, 창작의 문제와 예술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의 문제, 국제교류를 통한 다원적 가치체계의 흡수,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실현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사업안이 제안되었다. **삶을 채우는 예술**은 예술이 삶으로 침투하여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존엄을 완성하며, 예술의 원리를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하는 실천을 말한다. 여기서 다시 **예술의 생활화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로 나뉘어, 예술을 삶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녹여냄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문제와 소외지역 및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의 목표를 위한 예술적 개입을 이루는 문제로 쟁점을 만들어 이에 병행하는 사업안을 구성하였다. **미래를 여는 예술**은 미래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예술의 미래적 가치와 전망을 만들어가는 문제로서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으로 나뉘어 사업 구성이 이루어졌다.

2007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기본방향과 예산계획(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가 새롭게 정립하게 될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에 따라 2007년 중점 추진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을 실행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의 지원정책 의지를 표방하고자 방만하게

보이는 사업수를 대폭 축소 조정하여 위원회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형 사업 개발을 이루었으며, 소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예술현장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한 사업을 편성하였다. 지원체계의 개선에서는, 그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단순 관리·배분에 따른 재정지원의 한계에서 벗어나 재정·정보·시설·인적자원·연구조사 등 다각적인 예술자원을 활용한 종합지원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과 창작·매개·향수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구조 개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였는데 선택과 집중은 예술의 수월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에, 소액다건 방식은 예술의 참여와 향수를 목표로 하는 사업에 배치함으로써 사업 내용별 대응을 취하였다.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 다년간 지원과 장기지원제를 도입하고 지원의 효과가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효과를 배가하며 우수작품에 대한 사후지원방식을 강화하고 문화시설과 연계한 기획지원·발굴지원제 도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2002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부터 전략적인 배분을 위해 설정해왔던 지원목표를 「ARKO·비전·2010」에서 제시한 전략목표 및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편성 체계를 반영하여 전면 수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원 정책목표를 현행 5개에서 8개로 수정하였다. 기금정책 목표간 예산 배분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 행('06)		수 정('07)	
지 원 목 표	배 분	지 원 목 표	배 분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진흥 ① 예술창조역량강화 ② 문화향수기회확대 ③ 문화예술매개활동확대	70% (35%) (21%) (14%)	<input type="checkbox"/> 활기찬 예술현장 ①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②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③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④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50% (20%) (5%) (5%) (20%)
<input type="checkbox"/>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④ 지역문화활성화 ⑤ 문화예술교류활성화	30% (21%) (9%)	<input type="checkbox"/> 삶을 채우는 예술 ⑤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⑥ 예술의 생활화 <input type="checkbox"/> 미래를 여는 예술 ⑦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⑧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	35% (20%) (15%) 15% (7%) (8%)

[기금정책목표간 예산배분기준]

사업별 예산배분 기준과 더불어 2007 경상사업비 요구액 내역을 보면, 문예진흥기금사업 및 복권기금전입금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509억원 증가한 1,621억원(45.8% 증가)을 편성 요구한 바 있다. 위원회 전환을 계기로 지원목표의 재설정을 기준으로 하여 경상사업비가 편성된 것의 특징을 보면 우선 사업 우선 순위 및 성과를 재검토하여 사업 폐지를 결정한 사항이 있는데, 그 예로 올해의 예술상 사업이 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에서 복권기금 사업으로 사업을 편입 이동하였는데, 장애인 문화접근성 확대지원과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교정, 군부대시설 문화프로그램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가능하면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88억원 신규), 생활주변의 예술환경 만들기(50억원 신규), 예술창작지원 및 기반조성 지원(21억원 증액) 등이 있다.

예술진흥을 위한 예술기금 설치의 당위성

그러나 이번 기획예산처의 결정에 의해 실제로 수정된 지원 정책 목표에 따른 예산계획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결국 다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의 문제로 집결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은 비전과 사업목표의 중요도를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진흥의 당위성이 실현되기 위해 예산의 비율 배분이 정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의 폐지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문예진흥기금 재원 감소가 벌어지고 있고 또 문예진흥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으로써 이에 따른 재원 부족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구조를 구상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현재 부족액으로 인해 기금을 일정하게 헐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제 예술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와 당위성에 의거한 예산 인식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그간 신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 모색과 제안이 있어 왔더라도 복권 수익금 확보방안을 비롯하여 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 뉴서울골프장 관련 골프연습장사업 개발 운영방안, 대중골프장 또는 회원제골프장 추가건설 운영방안, 문화관광부 산하기금(부과금 포함)의 통합 운영을 통한 신규재원 확보 및 사업영역의 확대 영화관, 공연장의 입장료수익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활용,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 토토복권 수익금

확보, 기업메세나를 활용한 간접지원확대 등이다. 이러한 제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비전에 의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입증'될 수 있다는 당위성을 공유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 본다. 실제로 실효성 논쟁보다는 의지의 확산이 더 빠른 대응을 유발할 수 있는 법이어서 그렇다. 그런 점에서 진정으로 예술진흥을 목표로 하는 '예술기금' 설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움직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도 예술기금 설치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로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일이, 다시 말하면 예술이 어떻게 인간과 사회발전에 대한 동력이 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함으로써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복권기금사업을 예술진흥사업으로 전환하기위한 새로운 정책적 구도를 마련하는 일이라 하겠다. 현재 위원회에서 수행되는 복권기금의 규모는 순수예술진흥기금의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그런 점에서 전체 사업예산 중 실제 예술창작을 위한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것이다. 그런 상황은, 앞서 살펴보았지만, 결코 기금 배분식의 지원을 넘어 창작환경과 기반을 지원하며 장기적 지원을 통한 진정한 진흥을 이루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게다가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기금의 예술관련 사업을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에 대해 물리적으로만 적용하고 있어 대상의 제한으로 예술향수 계층에서의 묘한 역전현상도 불가피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안 20조에는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의 항목이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구도를 갖고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권위원회나 문화예술위원회가 이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영국의 경우 복권판매수입 가운데 16%를 정액제로 하여 예술진흥을 보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도 영국처럼 정액을 보장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드는 제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위원회 자체에서 예술계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 어떻게 복권기금사업이 예술진흥의 성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공익의 목적과 의미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확산시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구도를 마련하는 일이 더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는 위원회 측에서만 아니라, 복권위원회가 갖는 예술진흥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꿔갈 수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요구되고, 예술창작활동으로 인해 인간과 사회의 발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업과 정책구상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직접적인 조성이 아닌 간접적 방식의 하나로, 예술의 통합적 개념에 따른 관련 부서의 기금 운용 방안을 들 수 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은, 예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를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소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예술은 단순히 제도적 개념을 벗어나, 다시 말하면 극장과 미술관 중심의 개인 창작 활동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삶 속으로, 사회 속으로 개입하고 파고드는 예술창작의 양태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예술을 단순히 기술주의적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전제, 전문가의 개인별 창작의 세계로만 국한하지 않는 전제가 주어지는 것으로서 예술의 확장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럴 경우 예술창작지원의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부서의 재원을 공유할 수 있어, 창작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목표를 실현함과 동시에 재원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일테면 도시 경관과 예술의 결합, 지하철 환경 개선과 예술의 결합, 여성복지와 예술의 결합, 평화사업에 대한 예술의 결합, 환경에 대한 예술의 결합, 청소년 선도사업과 예술의 결합 등 다양한 경우가 가능한데, 사업과 예산수립을 지역의 도시사업이나 여성, 평화사업, 환경, 청소년 관련 부서와, 혹은 중앙정부 부처와 통합적인 체제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행정적으로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실현은 시도해 볼만한 사안이라 하겠다.

제3주제

민간자금화와 예술재원 확보방안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민간자금화와 예술재원 확보방안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

윤용중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1. 들어가며

-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지원)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 역할과 더불어 지식경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문화자본의 축적 등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는, 그동안 문화예술 지원을 담당하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 중심의 독립성을 가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체계를 개편하였음
- 또한, 공공지원의 주요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에 모금수입이 폐지되고 복권수익금을 배분받게 되었으며, 국가 재정 운용 체계의 변화에 따라 향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 등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음
- 본 발제문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의 주요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둘러싼 재정 운용의 환경 변화와 향후 문화예술 지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30년 이상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개요와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기금 운용의 환경 변화로서 최근의 국가 재정운용 체계의 변화와 민간자금화를 포함한 기금정비 등을 검토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논의되어야 할 몇가지 과제를 제시함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개요 및 현황

가. 설치 목적 및 근거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창조를 위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1973년 설치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설치 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문학·미술·음악·무용·전통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의 창작·보급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와 국제 문화교류 등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공공 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주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임
 - 과거 기금을 관리·운영하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2005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새로이 출범하면서 기금의 관리 주체도 변화하게 되었음

나. 재원의 조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기금의 조성)에 근거하여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
- 과거 극장, 공연장, 고궁, 박물관 등에서 입장료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2004년부터 모금이 폐지되었으며, 2004년부터 복권기금으로부터 복권사업 수익금을 전입 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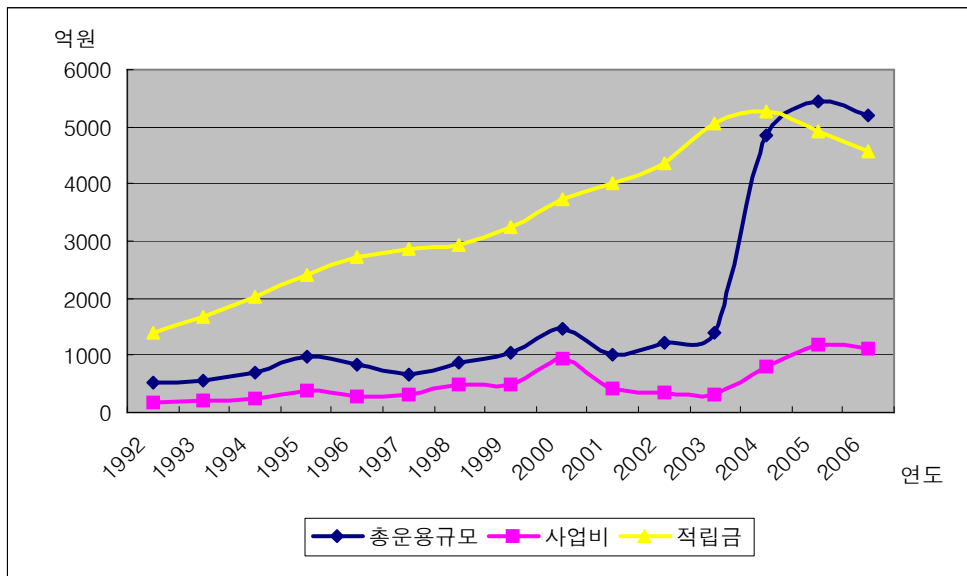
다. 주요 사업분야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남북 문화예술교류, 국제 문화예술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 사용할 수 있음
-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주요 사업목표는 예술 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등 5개로 설정하여 사업을 구성하고 있음

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현황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5,198억원 규모이며, 이중 사업비는 1,112억원 규모임
- 수입측면에서 보면, 2004년부터 모금수입이 폐지되면서 복권기금으로부터 수익금을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출연을 받고 있음
- 사업비 규모는 2003년까지 약 300억원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04년에 800억원, 2005년에 1,171억원, 2006년에는 1,112억원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04년 이전에 사업비 규모가 확대되었던 것은 1998년 출판금고 200억원 융자지원, 1999년 영화진흥금고 100억원 출연, 2000년 영화진흥금고에 500억원 출연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적립금 규모의 감소
 - 적립금 규모는 2004년 5,272억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343억원이 감소하여 4,929억원이며, 2006년 기금운용계획에서 346억원이 감소하여 4,583억원이 될 전망임

[그림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추이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최근의 재정 개혁과 기금의 정비 : 민간자금화 논의

가. 최근의 재정 개혁

- 최근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성과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재정 개혁은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재정 지출의 급격한 확대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 운용 시스템의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임
- 중기 재정운용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기금의 정비 및 통합재정 운용, 여유재원의 사업비 전환 등의 구체화된 노력도 진행 중임
 - 최근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가재정법」(안) 제13조에 따르면, 회계 및 기금간의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기금 제도의 의의

- 2006년 총 61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규모는 358조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44조 8,076억원의 2.5배이며, 이들 기금의 사업비 규모도 74조 6,415억원 규모에 달함
-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특정 자금의 사용
 - 「예산회계법」 제7조에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직적 재정 운용에 대한 보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주요 항목의 30% 이내에서 국회 통제 없이 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기금을 통한 재정 운용 규모가 일반예산의 2배에 달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과도한 재량적 집행이며, 칸막이식 재정 구조를 야기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사전적인 자원 배분
 - 과거 높은 정책 우선 순위를 확보하지 못했던 문화예술 부문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설치 이후 문화예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

- 2004년도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기금 운용 주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자금화를 제안하였으며 2005년도 5월 정부가 제시한 「특별회계 · 기금 정비방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민간자금

화 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 2005년 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 「민간자금」의 개념

- 민간자금의 개념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으며,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음
- 기금 명칭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적립금」 또는 「문화예술자금」으로 표현
- 재원 조성에 있어서, 정부 출연이 어려우며, 복권기금을 통한 사업비 출연도 법적 근거가 없어짐
-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변경, 결산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통제

- 민간자금의 사례로, 2003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민간자금화 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민간자금화 된 이후 정부출연금 등 정부내부수입이 단절되어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임

4. 안정적 예술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

가. 민간자금화의 적정성

- 민간자금화에 대한 권고는 2004년 「기금존치평가」를 통해서 제시되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대부분 사업들이 운영의 신축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할 당위성이 낮으며, 예산사업으로 이관할 경우 자율적인 문화예술 지원이 어려움
 - 기금의 조성재원과 사업운영을 공적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출연금 운영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정부가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도록 권고
 - 단순히 기금 정비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의 개수를 줄

이러는 접근은 부적절함

- 민간자금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행정적, 제도적으로도 민간자금의 운용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설정되지 못한 상태임
- 약 5,00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가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한 공공 자금으로서, 이것을 민간부문에 이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민간 자금화 이후, 이 자금을 통해서 문화예술부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제시되어야만 민간자금화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환경과 방향이 변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와는 다르게 부여되어 과거 정부가 운용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금과는 구별되는 성격의 민간자금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임
- 이런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민간자금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자금에 대한 법적 재정제도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향후 민간자금화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재정 통제 방식,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나. 기금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의 안정성

- 과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은 안정적 재원(모금수입)과 금융시장 여건(이자수입) 등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을 공공부문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향후 복지재정 지출의 확대 등의 재정운용의 환경 변화와 이를 대비한 재정운용체계의 개혁 과정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최근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가재정법」(안) 제13조에 따르면, 회계 및 기금간의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음

- 향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가지고 있는 약 5,000억원 규모의 여유재원(적립금)은,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운용 환경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어려움

□ 복권 수익금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 현재 복권기금으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는 법적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배분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향후 민간자금화 될 경우, 민간자금에 대한 배분도 현행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민간자금에 대한 성격이 규정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복권수익금의 운용이 민간자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재정 운용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독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도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될 것임
- 기금 운용의 독립성
 - 2004년 이후 모금수입은 폐지되어 기금 재원의 여건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복권 수익금의 확보에 따라 사업비의 급격한 확대되었음
 - 사업비 확대는 문화예술지원의 확대로 해석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하면 문화관광부의 국고성 사업이 상당부분 이관되었음
 - 현재에도 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국고성 사업(예산사업)의 정비가 필요
- 복권수익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
 - 민간자금화 이후 문화관광부를 통해 복권기금의 수익금 배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복권기금의 수익금은 타 자금과는 구분계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는 전입 받을 수 없으며, 외형적으로는 복권위원회의 자체 사업의 형식으로 수행되며, 복권위원회가 문화관광부의 회계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수행하게 됨

- 따라서 향후 복권기금을 통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관광부의 관여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 또한, 복권기금의 목적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분야 및 사업 방향에 제약을 가하게 됨

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 자원에 기초하여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임
- 더구나 위원회 활동의 재원인 5,00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만큼 기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필요함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의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접근은 기금에 대한 재정통제 이전에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형태로 회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해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통제하고 기금을 정비해 가는 재정제도의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성과계약에 의한 책임성 확보
 - 독립성을 가진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문화관광부장관과 위원장 사이의 성과계약을 통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성과계약을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함
 - 성과계약서에는 문화관광부와 협의관계 의사소통 방식 등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의 개입 한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의 재정 지원 규모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토록 함

- 중앙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 간의 계약은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재정지원협약서(Funding Agreement)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